아파트 층수 규제 완화 '과밀 광주' 우려

〈2종 일반주거지역 15층 → 18층〉

광주시 도시계획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장기 미집행 도로부지 음식점 등 허용

자연녹지내 유원지 건폐율 30% 이내로

정부의 건설경기 부양책에 따라 광주시가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건물층수 제한을 기존 15층 이하에서 18층 이하로 완화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정부의 건설경기 부양책의 일환으로 광주 주거지역과 장기간 사업에 착수하지 못한 도로나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규제가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광주광역시도시계획조례 개정조례안'을 최근 입법예고하고 오는 21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다.

우선 이 개정조례안이 광주시의회에서 통과될 경우 광주시내 주거지역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적용됐던 건축물의 층수 규제가 기존 15층 이하에서 18층 이하(연립건물의 경우 평균층수 18층 이하)로 조정된다.

지난 2003년 7월1일자로 시행된 용도지역 세분화에 따라 기존 아파트 지역이 제3종 일반주거지역, 단독주택지역이 제1종 일반주거지역, 나머지 주거지역이 모두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것을 감안하면, 지금까지 경제성을 이유로 아파트 개발이 미뤄진 지역에서 고층 아파트 개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특히 광주지역 내 재개발이나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이 주춤하고 있는 가운데 도심내 자투리땅이 새로운 개발 가능지로 탈바꿈하게 되면서 미분양, 도시경관이나 디자인 침해, 일조권 분쟁 등의 문제가 지역 내에서 부각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이와 함께 이번 조례 개정안은 장기간 미집행된 도로나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단란주점이나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등을 제외한 음식점, 제과점, 소규모 공연장, 금융업소 등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허용하도록 했다. 광주시내 장기간 미집행된 28곳, 1천160만㎡에 이르는 공원은 조성계획이 이미 수립돼 있어 이번 조치에 따른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도로의 경우 토지소유주들의 개발이 가능하게 됐다.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된 지 10년 이상이 지난 도로의 경우 일정한 절차를 거치면 자체적인 개발이 가능해지며, 이에 따라 광주시의 전반적인 도로 계획도 일부 수정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대지의 해제기준면적을 1천㎡ 미만으로 설정하고, 계획관리지역내 기존 공장을 기존 부지 내에서 증축할 경우 건폐율을 50%까지, 자연녹지지역내 유원지의 건폐율도 30% 이내로 각각 완화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한 도시계획 전문가는 "개성 있는 도시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만 적용가능한 규제완화가 지역에까지 확대됐다"며 "광주시가 철저한 사전조사를 통해 고층아파트나 주거지역에 대한 관리 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중앙정부의 규제완화와 어떻게 조율해 갈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유원지 및 공원의 건폐율을 규정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수를 조정하는 등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수용하는 것으로 그동안 조례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국세청 간부 TK가 장악

백용호청장 취임후 영남 집중 심화

국세청의 간부진은 영남 출신이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민주당 김효석 의원(담양·곡성·구례)이 6일 배포한 국세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 본청 과장급 이상 간부 50명의 출신지(고교)별로 분석한 결과 수도권이 17명인 반면 영남은 19명으로 전체의 48%를 차지했다. 이에 반해 호남은 겨우 6명(12%) 이었고 충청권은 4명(8%)에 불과했다.

특히 이 같은 현상은 현 백용호 국세청장 취임 전인 올초 분포인 수도권 11명, 충청권 11명, 영남 14명, 호남 9명과 다른 것으로 지난 7월 백 청장 취임 후 영남 집중이 보다 심화한 것으로 김 의원은 분석했다.

같은 당 강성종 의원도 이날 국감자료를 통해 국세청 고위공무원단 31명 중 외부인사와 공석(중부청 조사3국장)을 제외한 27명의 출신지 가운데 영남 출신이 17명으로 63%를 차지했으며, 이 중에서 TK(대구·경북)출신은 11명으로 전체의 41%를 기록했다.

반면 수도권 4명, 호남과 충청지역은 각각 3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서울지방국세청장, 서울국세청 조사1·2·3·4국장, 중부국세청 조사1·2국장 등 요직도 모두 100% 영남 출신이 독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공무원 시험을 통해 들어오는 신입자의 분포는 지역별로 고르게 나타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위직에서 이처럼 지역 치우침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반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전남 수협 대출 연체 전국의 40%

자본 잠식 부실조합 속출…횡령·배임도 잦아

전남지역 수협들의 '도덕 불감증'이 도를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6일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경남 사천)에 따르면 7월말 현재 전남지역 수협들의 대출금은 1조6천25억원으로 이 중 2천869억원이 연체돼 연체율이 17.91%에 달했다.

이는 전체 대출금 연체액 7천51억원의 40%에 이르고 전국 평균 연체율 7.4%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다.

또 부실 조합 5곳 중 3곳이 전남지역 수협인 것으로 밝혀졌다.

흑산도수협의 경우 지난해 자기자본비율이 -68.9%로 지난 2003년 -10.7%에 비해 크게 하락했다.

장흥군수협도 2004년 -27.3%에서 지난해 -40.6%로, 전남서부수협은 2004년 -10.8%이던 자기자본비율이 4년새 -39.3%로 떨어졌다.

여기에 금일수협은 자기자본비율이 -3.1%로 새로 부실우려조합으로 지정됐고, 자본이 잠식된 조합도 전국 29개 조합 중 12곳이 전남지역 수협이었다.

특히 자본 잠식이 부실수협으로 회생이 불가능한 흑산도수협과 서남해수어류수협, 완도군수협에서는 총 12억원의 횡령·배임 사고가 발생했다.

강진군수협, 완도군수협, 흑산도수협에서는 비리 사고가 연간 2회 이상 일어났다.

연체, 신용관리, 파산, 개인회생 등으로 채무 불이행한 조합원도 전남지역이 전체의 87%를 차지했다.

특히 장흥군수협은 파산 및 개인회생 급증으로 지난해 40억원이나 부실채권이 발생했다.

전국적으로는 수협 조합원 16만8천명 중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조합원은 총 2만4천829명이나 됐다. 이는 전체 조합원 대비 15% 해당하는 것으로 7명 중 1명이 '신용불량'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체자나 신용관리대상자 수는 점차 줄어들고 있는 반면, 파산 및 개인회생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는 2004년 1명에서 올해 6월말 2천26명으로 급증했다.

강기갑 의원은 "농어가 부채 해결은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 사안이다"며 "현재 농어가부채대책법이 국회에 제출돼 있지만 수협 차원에서 부채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적극 알리고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조달청 발주 공사 수주 광주 업체 전국 최하위

수주액 비중 0.9%로 대전의 20% 불과…전남은 7.5% 전국 3위

광주지역 기업들의 국가 공공조달 시설공사와 물품조달 분야 수주 규모가 전국 16개 시도중 최하위권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강운태 의원(광주 남)이 6일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8월말까지 조달청이 발주한 전체 시설공사 발주량 4천780건(20조373억원) 중 광주지역 기업이 80건(1천822억원)을 수주했다.

이는 금액으로 비교했을 때 전체의 0.9%에 불과한 것으로 16개 광역지자체 중 15위 수준이다. 경쟁 광역시의 경우 대전이 4.2%, 인천 2.7%, 부산과 대구는 1.8%, 울산 1.6%의 비중을 각각 기록하는 등 광주지역 기업보다 2~4배 규모의 공사를 수주했다.

특히 대전(1천970개)과 울산(1천438개)의 조달청 시설공사 등록업체 수가 광주시(1천704개)와 비슷하거나 적은데도 수주율이 월등히 높아 광주지역 기업의 경쟁력이 취약함을 보여줬다.

광주지역 기업은 지난해에도 104건에 1천463억원을 수주, 1.1%의 비중으로 전국 15위를 기록했다.

반면 전남지역 기업은 올해 8월말까지 355건(1조5,090억원)을 수주해 7.5%(금액 기준) 비중으로 서울과 경기에 이어 3위의 수주율을 기록했다.

물품계약의 경우에서도 광주지역 기업은 올 8월말까지 전체 발주량 66만5천907건(10조7천824억원) 중 1만1천507건(2천473억원)으로 수주, 금액 대비 2.3%의 비중으로 전국 지자체 중 14위를 차지했다.

전남지역 기업도 1만6천035건(3천443억원)을 수주, 금액 대비 3.2%의 비중으로 전국 11위의 낮은 수주율을 보였다.

또 낙찰실적이 한 건도 없는 업체가 물품계약의 경우 광주·전남지역 기업 모두 9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 물품등록 광주지역 기업 2천782개 중 낙찰실적이 없는 업체는 2천556개나 됐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이다. 전남지역 기업도 등록 기업 4천852개 중 91%인 4천419개가 낙찰 실적이 한 건도 없었다.

시설공사의 경우 광주지역 등록업체 1천704개 중 25.6%인 401개 업체, 전남지역 등록업체 5천173개 중 23.6%인 1천169개 업체가 낙찰실적이 없는 등 정부 공공조달시장에서 소외를 받았다.

이와 함께 광주·전남지역 기업들은 조달청이 가격·품질·성능을 평가해 지정·등록 하는 우수제품 등록실적과 신기술제품 개발에도 취약한 결과를 보였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